

# “고통 심한 서민 현금 지원이 최고” vs “포퓰리즘 재정 파탄”

## 지구촌 핫이슈 기본소득제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논쟁이 뜨겁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지원대책없는 기본소득제는 포퓰리즘이며 양극의 지름길이란 비판도 만만찮다.

기본소득제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선 막대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노동 의욕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찬성 측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도 예견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형태를

스페인 등 유럽 월 150만원선 일률 지급 검토  
스코틀랜드 연 1100유로·LA 등 9개시도 추진  
한국에선 재원 대책·증세 문제 등 신중론 우세

놓고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만원이나 20만원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 차츰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급 대상은 청년이나 노인부터 한정해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24’는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그간 극단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지난 5월 저소득층 노동자 250만명의 한달 최저임금을 1108유로(한화 약 143만원)로 정하면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스페인 정부는 유럽최초로 6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85만가구, 약 230만명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오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자 월 최저소득을 가구 구성원에 따

라 462유로(한화 약 62만원)에서 1105유로(한화 약 150만원)까지로 설정하고 실업수당 등 공공지원금을 포함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액이 확정된 이후 소득이 늘어도 기존 지원액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니콜라 스타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시점이 왔다”면서 연 1100유로(한화 약 148만원)의 기본소득을 스코틀랜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6월29일 로스앤젤레스(LA), 애틀랜타 등 9개 도시 시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장 연합’을 꾸려 기본소득제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수면 아래서 논의된 기본소득이 갑자기 세계 곳곳에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옥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현금의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론은 주로 진보정치세력들이 일찍이 주장해 왔다. 사진은 2009년 노동절 집회에서 기본소득 재실시를 주장하던 사회당 당원들.

퍼드대 티모시 애시 교수 연구팀이 최근 영국인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각국 시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옥스퍼드대는 “기본소득처럼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이라는 취

급을 받았던 급진적 정책들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사회담론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김경환 학생기자

## 별도 증세 없이도 당장 시행 가능...소비 진작으로 경제 선순환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

기본소득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정치인이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재명지사는 별도의 증세를 하지 않고 기존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 말하는 재정건정성도 결코 망가지질 일 없다며 ‘기본소득 공개토론’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지사의 기본소득론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무렵 ‘국회 기본 소득 연구포럼 세미나’에서는 격렬한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소득을 가구당 50만원부터 시작해 10~15년 사이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사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에 대해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 대책으로 기본소득만 한 것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한 해 기본

이지사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세금’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세금이 징벌이 아니고 공동체 모두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저항이 매우 적어질 것”이라며 “경제성장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성장의 혜택을 납세자가 함께 누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적으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복지효과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본소득으로 돌려 경제 선순환 기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며, 불평등을 지체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복지국가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도가 추진 중 중단되었던 사례도 있다. 과한 재정 소요와 함께 ‘근로 의욕 저하’가 가장 큰 한계였다고 한다.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측은 무리한 증세계획도 문제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소득에 대한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괄 같은 액수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건우학생기자

## 용자·특례보증 등 9종 세트 마련

### 광주시의 소상공인 지원책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광주지역 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이 크다. 이에따라 광주광역시시는 가용재원을 죄다 쥐어 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시는 계속나오는 확진자로 인해 지난 8월 27일 지자체 최초로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가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영세상

공인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얘기가. 서구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학원을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가 터졌고, 3단계 명령이 내려진 8월에는 모든 집합시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3분기 영업실적이 전 분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A씨는 “당장 학원 유지비용(전기세, 월세포함)이 감당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음대 졸업하고 부모님 손 벌리기 싫어서 4년 동안 호주로 워홀도 가고 알바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아서 지금 학원을 차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 4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이예요”라고 말했다. A씨는 덧붙여 “등록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보낸다고 하시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매일 신규확진자가 추가 될 때마다 걱정만 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8월 광주지역 일반음식점 폐업은 265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

간 22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8.8% 증가한 수치다. 일반음식점 폐업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식을 찾는 가정이 늘고 외부 출입을 줄이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광역시시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금지원, 소비촉진, 점포재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주시가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용자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운영,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운영, 빚고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 금융 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노년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등 전 분야별로 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은 광주광역시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사업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표로, 현재 골목상권에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서비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최태양 학생기자

## 5월 전국민 일괄 지급...9월엔 소상공인 선별 최대 200만원 지급

### 논란 속 시행된 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며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일정 액수의 현

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초기에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겠다고 3월 30일 발표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되었다.

행정안전부는 6월2일 0시 기준 지급대상 가구 2171만개 중 98.6%인 214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수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나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원 달러 선

별 지원됐다. 국회가 2020년 9월 22일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통과시점에 따라,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키 가구 등에 대해 최소50만원에서 최대200만원까지 2차 긴급재난금이 지원되었다.

그 외 중학생 이하 아동 가구 지원 및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되었다.

김경환 학생기자



작은실천!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전약속입니다.